

**상각기간 연장
첨단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규정 신설**

항공이나 우주산업 등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연구개발비는 5년 이내에 상각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과생금융상품이 본격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이외에 투기목적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신설된다. 3월15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용화까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항공산업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상각할 경우정작 상용화돼 수출될 때는 덩핑 등의 문제가 따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비라도 미래에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균등 상각하는 대신

당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주인공 연세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희해서 하반기에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도입신고제 폐지

항공우주등 3개업종 제외

다음달부터 항공우주, 방위, 원자력 등 3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기술도입신고제도가 폐지된다.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재정경제원은 3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방산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주거래 은행의 외환지급인증이나 사후확인만으로 자유롭게 외국기술을 도입할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술도입신고제도를 이같이 개정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그간 자동차나 유화 등 특

정업종에 대해 신규진입 또는 설비증설을 막는 장치로 인식돼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방산, 원자력, 항공 등 업종은 안보나 첨단기술의 개발 차원에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입신고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대정부 질문서 주장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용기 개발회사를 통합하고 항공우주연구소를 '국립우주항공연구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17일 국회 경제 및 국방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고도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드는 항공산업 업체들의 통합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삼 의원(민자)은 정보통신부도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 구상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동전화의 통화성공률 제고와 질적 서비스를 단시간내

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의 꿈, 나아가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와 해양정책 및 제도가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국립우주항공연구소>로, 해양연구소를 <국립해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제도와 인력, 예산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국방장관은 나병선 의원의 항공산업 통합합론에 대해 동의를 뜻을 표하고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2월 21일 '군용기 개발사업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산부와 국방부는 3월 9일자로 '방위산업 물자와 방위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내용'을 공고하고 항공기를 제외한 주요 군수장비의 공급업체(최종조립업체)는 원칙적으로 단수 업체만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전문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군용기 부문의 전문화 시도는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기술” 신규지정 해외도입기술 288종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내기업의 해외기술 도입관련 2백88종,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2백61종의 고도기술을 각각 새로 선정,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부품소재산업과 첨단기술을 육성키로 했다.

3월 31일 재정경제원은 해외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때 조세감면(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의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 4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이나 외국인 투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고도기술은 *항공수송 *전자 정보 전기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 소재 *신물질 생물산업 *광학 의료기기* 환경 에너지 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기술도입은 94개항목 2백88종, 외국인 투자는 81개항목 2백61종의 세부기술로 각각 확정됐다.

항공분야 고시 채용확대 과학기술자문위 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현재 20% 수준인 중앙정부의 기술직 비율을 민간기업 수준인 50%선으로 높여줄 것

등을 뼈대로 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3월 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각 부처 직제상 행정직으로 제한된 기획, 정책 등의 직위를 복수직화하고 석·박사급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중간관리층으로 특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기계·화학 등 9개 분야에 연간 39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고시 채용에 원자력·항공 등을 추가해 세분화하고 채용 인원도 정보·첨단분야 중심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문회의는 94년 기준으로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공부문 참여 비율은 국회의원의 2%, 정부 각료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9%인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10대 그룹 최고경영자의 33%, 10대 그룹 임원의 52%가 각각 과학기술 전공자라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민생 위주의 생산성있는 정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상당 부분 할당하고 국회에 환경·에너지·정보 등에 관한 전문기구와 전문위원을 둘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이공계 전공자

들이 전문분야 법률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 등도 보고했다.

예약불이행에 벌금 항공표 판매에 새 제도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가 안쓰는 사람은 빠르면 올해 중반부터 “부도수수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월 23일 신의있는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항공운송약관을 개정,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공표 부도 수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예약자가 예매를 해놓고 탑승을 안할 경우 10%안팎의 수수료를 해당구좌에서 자동으로 빼내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또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3일안에 항공권을 사지 않으면 컴퓨터가 예약을 자동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 공군비행장에 민항기 취항 건의안 부결

경기도의회는 3월 23일 제8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공군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위한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

석의원 64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18, 기권 32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반대의원들은 “수원공군비행장에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인근 지역 14만여명의 주민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민항기의 군 비행장 사용허가 문제, 이용 항공 수요와 비행장내 민항시설 설치 비용 부담기관, 주민 피해 예방 대책 등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국방부에 수원공군비행장에 대한 민항기 취항을 건의한 결과 최근 국방부로부터 주 2회 민항기 취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3월 16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국방부는 “수원비행장이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위를 위한 최북부기지이고 군용기의 활동이 빈번해 민항취항은 부적절하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조건부로 주 2회취항이 가능하다”고 경기도에 회신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민항기 취항을 위해서는 영의에 별도로 민항 여객터미널과 계류장을 설치해야 하고 유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군당

국의 양해각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협상 또 결렬 한-대만간 항공로 회복에

한국과 대만간의 항공로 회복에 관한 회담이 3월 17일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나 한국이 대만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대만의 주장 때문에 결렬됐다.

창 쿠오-첵 대만대표는 “한국측이 17일오후 입장을 바꾸어 회담을 계속할 것을 요구해 오지 않는한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결렬이 한국대표단이 항공협정 문안에 대만의 주권을 의미하는 “영토”라고 표기하지 않고 “지역”으로 할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쌍방은 작년11월 한국측 요청으로 첫 항공회담을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측이 회담재개를 요청하자 대만측은 그들의 동등·상호 이익 정책을 거듭 내세웠다.

한편, 회담후 정우성 외무부 국제무역국 부국장이 이끄는 9명의 한국대표단 수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대북한국대표부 이수준 정무담당 대표보가 귀한으로

부터 의문의 피습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KS심사기준 제정

공진청 항공등, 활주로 설비에

공업진흥청은 비행장 매립등, 노출형 활주로등 및 매립형 절연 변압기등 공항 내·외부에 설치되는 3종의 항공등에 대해 KS표시허가 심사기준을 제정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공진청은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10종의 항공등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했다.

한편 공진청은 항공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항공등 업계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공조명 분야에서의 KS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공항의 경우 1개 활주로에 설치되는 항공등은 15종에 4천2백여개가 필요하고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2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수요량의 70%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강우 시도

4월 가뭄 심한 지역서

가뭄극복을 위한 국내 첫 인공강우가 4월중 남부지방에서 시도

된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월 14일 심우영 경북지사로 부터 가뭄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뭄 극복방안의 하나로 인공강우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4월초 구름상태를 보아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실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도 인공강우 실험에 소요되는 예산3억4천만원을 기상청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5월말까지 항공기를 이용한 실험 10회와 지상실험 12회를 실시키로 했으며, 첫 항공기실험은 포항 부근에서, 지상실험은 소백산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도 "인공강우가 가뭄해소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지만 가뭄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갈수기인 4~5월에 인공강우를 실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인공강우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99년까지 5년간 계속 연구-실험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예산10억8천만원을 재경원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공군의 기상전대요원과 항공기등이 황사현상연구와 인공강우실험에 참여하게 돼 항공기를 이용한 기상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산부

'95 산업기술시책 발간

통상산업부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 기술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추진해 나갈 산업기술시책을 책자로 꾸며 발간했다.

'1995 산업기술시책'은 통산부의 산업기술시책과 특허청, 공업진흥청 등 통산부 외청, 18개 통산부 산하 기술관련 기관·단체 및 전국 15개 시·도의 산업기술시책 및 지원제도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통산부가 본부, 외청, 유관기관가 전국 시·도의 산업기술시책을 종합발표하는 것은 산업기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통산부는 올해에는 종전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정비해 산업별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획득능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말 제정된 공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조성법에 따라 기술기반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항공관제공사 설립추진 미국, FAA와는 별도로

미국은 항공 운항 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연방항공국(FAA)과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5일 미하원세출위 교통소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미정부는 FAA가 날로 폭증하는 항공 운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현될 경우 4만여명이 일하게 될 미항공 교통서비스공사(USATS: 가칭)를 창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USATS는 설립될 경우 항공관제(ATC) 체제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장기적인 항공 안전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반면 FAA는 USATS가 마련할 모든 항공 안전 방안을 궁극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FAA가 급진전되는 첨단 항공 관련 기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또날로 폭증하는 항공기 운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USATS 설립이 모색돼온 것이라면서 향후 FAA와 USATS간 위상 설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AA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해오지 못해온 점에 대해 보고서는 한 예로 보잉사가새로 시장에 내놓은 747-400기를 성능 검증함에 있어 FAA 기술진이 이 기종의 복잡한 항공관장시스템(Flight Management System)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은바있다고 밝혔다.

USATS가 설립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은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공항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이착륙 간격(Separations Standard)을 재조종하는 문제와 *항공 관제장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경비행기 안전규정 강화

미 교통부는 10-30인승 경비행기에 대형 제트항공기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강력한 안전규정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이번 안전규정 강화

조치로 관련업체가 1년에 3천만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부담을 안게될 것이며 이로인한 요금인상요인등 승객의 경제적 부담은 1인당 1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년내에 발효될 새규정에는 조종사 훈련 및 비행, 근무시간, 항공기 운항검필증 발급등의 제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NASA등 연방기구 개편 미국, 재정적자 축소위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3월 27일 내무부, 항공우주국(NASA), 중소기업관리국(SBA), 연방비상관리국 등 4개 연방정부기관을 개편, 5년동안에 걸쳐 4천8백5개의 정부직책을 없애고 1백31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4개 연방기관의 예산 및 인원 감축계획중 제일 규모가 큰것은 NASA로 80억달러의 경비가 삭감되고 2천개의 직책이 없어진다. 대니얼 골드인 NASA국장은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안전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나 개편계획에 따라 어떤 우주 계획이 '희생'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